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

제41대 조지훈 전주시장, 취임식 대신 정책브리핑 통해 시정철학·정책 공유… 민선 9기 힘찬 출발

제41대 조지훈 전주시장이 형식적인 취임식 대신 전주시 공직자들과 시정 철학을 공유하는 정책브리핑을 갖는 것으로 민선9기 전주시의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취임 첫날인 1일 시청 강당에서 전주시 공무원과 안국찬 위원장을 비롯해 인수위원회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전주시가 추진할 시정철학과 핵심 정책 등을 공유하기 위한 민선 9기 정책브리핑 및 청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는 기존의 관행적인 취임식에서 탈피해,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정책을 공유해 속도감 있는 정책 중심의 시정을 이끌겠다는 조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날 정책브리핑은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전주시의 시정철학과 비전을 공직사회와 먼저 공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 창출을 통해 시민 주권과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자리로 꾸며졌다.



제41대 조지훈 전주시장이 형식적인 취임식 대신 전주시 공직자들과 시정 철학을 공유하는 정책브리핑을 갖는 것으로 민선9기 전주시의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취임 선서에서 이어 직접 정책브리핑을 이끌며 민선 9기 시정 비전과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또,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라는 민선9기 시정 목표달성을 위한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실천과 참여를 당부했다.

조 시장은 이어진 ‘청원과의 대화’를 통해 공무원들과 시정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등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시정 혁신의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시는 이번 정책브리핑을 시작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정책과 성과로 실현하고,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 체감형 시정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조 시장은 이날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과 전북독립운동추진탑, 군경묘지를 차례로 참배하고, 사무인수인사에 서명하는 것으로 민선9기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조 시장은 2일에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방문해 AI(인공지능)·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현장을 방문해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시정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민선 9기의 성공은 공직사회의 변화와 실천에서 시작된다”면서 “시민과 약속드린 정책을 공직사회와 함께 구체화하고 실행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를 꼭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취임 첫날 장마철 재난대응체계 점검

조지훈 전주시장, 시민 안전 위한 자연재난 대응회의 주제

조지훈 전주시장이 민선 9기 전주시에 시작된 첫날 시민 안전을 위한 장마철 자연재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전주시는 1일 시청 8층 재난상황실에서 조지훈 전주시장 주재로 도로·하천 등 관계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마철 도태에 따른 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부서별 사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재난 발생 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대응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회의는 조 시장이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한 재난안전 분야 점검회의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현안을 최우선으로 살피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날 회의는 재난안전과의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호우·태풍 종합대책’ 보고를 시작으로, 도로·하천 등 관계부서별 장마철 대비상황 보고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여름철 자

연재난 대응을 위해 △현장 중심 대응 체계 강화 △취업지역 관리 강화 △취약계층 보호 강화 △피해 수습체계 구축 등을 중점과제로 정하고 부서별 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부서별 소관 시설물과 취약지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상 상황에 따른 상황 전파와 현장 통제, 주민 대피, 응급 복구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장마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시정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각 부서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험 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 시장은 “하천과 지하공간, 급경사지, 상습침수지역 등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사전점검과 안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장마철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함께 촘촘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가 노인들이 생활하는 요양시설 내 방치된 공간을 활용해 요양시설 이용자와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나눔숲을 추가 조성키로 했다.

전주시, 복권기금으로 신성양로원에 나눔숲 조성

전주시가 노인들이 생활하는 요양시설 내 방치된 공간을 활용해 요양시설 이용자와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나눔숲을 추가 조성키로 했다.

시는 올해 산림청 녹색자금 지원사업(녹색인프라 확충) 국비 1억6000만 원을 지원받아 오는 11월까지 삼천동 신성양로원(완산구 계룡산길 44-10) 일원 1020㎡ 부지에 녹색 나눔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2026년도 산림청 녹색자금 지원 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시는 신성양로원 내 유휴 공간에 시

설 이용자와 인근 어린이집 원아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이곳에 등백나무 등 95그루의 교목류와 남천 등 1640그루의 관목류, 꽃잔디 등 400본의 초화류 등 총 1735그루의 수목을 식재한다. 또, 사회적 약자층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산책로와 퍼즐터, 벤치, 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신성양로원은 나눔숲 조성 이후에 이곳을 상시 개방해 누구에게나 열린 복지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조지훈 전주시장, 첫 결재는 ‘재정혁신’

비상 재정 극복 위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구성… “시민 앞에 재정 상황 투명 공개”

조지훈 전주시장이 전주시에 비상 재정 상황 극복을 위한 재정혁신 방안에 결재하는 것으로 민선9기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조지훈 시장은 시장 취임 첫날인 1일 비상 재정 극복을 위한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결재했다.

조 시장이 민선9기 첫 결재로 비상 재정 극복을 위한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선택한 것은 전주시 재정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시정 최우선 과제로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예산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줄고, 복지·청소·운수업 등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자체사업 추진 어려움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주재원만으로 의무 경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와 대규모 시설 투자로 지방채 부담까지 맞물리면서 전반적인 재정 운용 구조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재정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세출 구조조정, 대규모 투자사업 재조정 검토 및 주요

재정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지방재정·회계, 세무·법률, 경영·행정, 시민소통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여하게 된다.

시는 이날 중 위원 공개 모집과 선정 절차를 거쳐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재정혁신 과제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재정혁신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시민의 삶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재정의 체질을 바꾸는 과정”이라며 “외부 전문가, 시민사회와 함께 전주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고 민선9기 시정 운영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기간 연장

전주시는 경기침체 및 고물가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 기간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4월 7일) 기준으로 전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지난해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카드가맹점의 소상공인이다.

단, △공고일 이전 폐업했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사업장 △유형업과 도박업 등 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신청 기간 내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의 통합신청지원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6682, 2373)로 문의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린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날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채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